

統一 지향의 政治教育

高 成 國

(高麗大, 政治學)

1. 問題提起

統一이 이 시대의 民族的 課題이자 歷史的 當爲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된 국가의 구체적인 정치 지향이나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물론 통일로 가기 위한 과도기에서의 南·北韓 간 정치 연관에 대한 論議는 全無하다고 할 수 있다. 한민족 공동체 방안이건 연방제 방안이건 그것들은 통일 국가로의 대체적인 접근 경로이지 각 시기·단계에 조응하는 구체적인 정치 구조의 구상은 아니다.

물론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의 차원에서 볼 때, 위에서 지적한 구체적 대안은 그 교육 내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分斷 45년의 역사가 남·북한 사회의 異質化를 심화시켜 온 역사였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統一指向의 教育은 무엇보다 먼저 이 異質性을 克服하고 同質性을 共有하는 내용을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異質性의 문제는 사회 각 영역마다 상당한 편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이질성의 문제가 현실로 轉化되는 매개 영역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언어나 풍속 부문에서의 이질성이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社會制度나 政治體制 및 政治文化에서의 이질성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그러므로 統一指向의 教育에 있어 政治教育의 중요성은 이질성의 극복과 동질성의 공유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異質性의 存在樣式

政治體制와 政治文化에 있어서의 異質性은 45년 이래 남·북한이 걸어온 전혀 상반된 정치 전개 과정에 근거한다. 미 군정기를 통해 자본주의 정치 제도를 이식받고 한국 전쟁을 거쳐면서 그것을 유일한 체제로 구축해 온 南韓은 3공화국 이래 장기간의 군부 독재 정권 아래에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내용을 훼손하고 제한시켜 왔다. 반면에 해방 직후부터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北韓은 한국 전쟁 후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면서 '60년대 이래 김일성의 유일지도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조선로동당의 일당 지배 구조를 확고하게 구축하였다.

남·북한의 정치 권력은 매우 역설적이게도 한국 전쟁이나 7·4 남북 공동 성명 등 남·북한이 밀접한 관련을 맺은 다양한 정치적 계기를 통해 각각의 정치적 지배를 확고히 구축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남·북한의 대립은 남·북한 정권에게 반사적 이익을 제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분단 45년이 지난 지금 남한은 비록 민주화라는 시대적 대세가 관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제한적인 자본주의 정치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북한은 40여년에 걸친 조선로동당과 김일성의 유일적 지배가 후계 문제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政治文化에 있어서의 異質性은 위에서 지적한 정치 권력과 지배 구조의 차이에 근거하면서 그와 동시에 사회 구조 전체의 이질성과 결합되어 매우 두드러져 보인다.

남한이 反共과 反北이라는 이데올로기와 親美라는 정서(mentality)로 무장되어 있다면, 북한은 反資本主義와 反美로 무장되어 있다. 남한 대중의 政治行態가 개별화되고 상대적으로 다양하다면, 북한의 그것은 집단화되고 상대적으로 단일화되어 있다. 남한 사회의 社會組織原理가 개인의 이해에 근거한 타산적 결합에 의존한다면, 북한 사회의 사회 조직 원리는 헌신과 열정이라는 주의주의적(voluntalistic)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한 대중의 정치가 정기적으로 제도화된 틀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 대중의 정치는 일상적인 생활 전 부문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한의 정치가 국민 대중을 대상화시킴으로써 정치 자체를 대중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었다면, 북한의 정치는 국민 대중을 對自化시킴으로써 정치 자체를 대중에게 해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差別性은 정치적 동원과 정치 사회화 과정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노정시키고 있다. 그동안 남한에서 진행된 정치적 동원이 대중의 탈정치화를 전제로 한 제한적 동원이었으며, 그 제한적 동원 역시 정치 권력의 필요에 의한 자의적 선택의 영역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정치적 동원 또한 전혀 맥락은 다르지만, 정치 권력에 의한 선택적 동원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사회주의 건설기에 있어 경제적 유인이 아닌 정치적 유인에 의한 경제적 동원의 필요성은 동원의 수준과 강도를 대단히 높게 하였지만, 그것은 여전히 전면적인 정치화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政治社會化에 있어서도 남한이 그것을 자본주

의 사회의 각 부문·영역에서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자생성에 근거하여 수행하였다면, 북한은 정치 사회화 과정 자체를 정치적 동원을 위한 제한적 정치화의 수준에서 수행하였다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하여 남한 사회에서의 이상적(ideal type) 인간 모형이 자본주의적 기술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적 인간으로 상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만큼이나 북한 사회에서의 이념형적 인간 모형으로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한 정치적 인간이 상정되는 것 역시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남한 사회에서 일반화된 통념으로서의 政治文化는 정치의 자유 경쟁이며, 그 자유 경쟁에 적합하게 정치 사회화되고 동원되는 세속화된 개별적 인간들 간의 타산적 관계의 총체로서 파악될 수 있다면, 북한 사회에서의 정치 문화는 자유 경쟁을 지양한 집체적 인간 관계에 의한 주의주의적 가치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差別性의 現象化가 그간의 정치 과정을 통해 反射的으로 強化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이질성의 심각성은 쉽게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統一이 이 시대의 민족적 과제로서 우리에게 제시된다면, 위에서 정리한 異質性은 克服의 대상으로서 파악될 때만 그 본래의 分析的 意義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질성이 단순히 해소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統一된 祖國의 發展을 전제로 하는 止揚의 課題로서 제시되는 것이라면, 이질성의 극복은 새로운 政治文化와 새로운 政治的人間型 그리고 새로운 政治關係와 새로운 政治體制의 指向을 극복의 과정에서 창출·공유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3. 異質性의 止揚

위와 같은 문체 의식에 근거하여 이질성의 극복을 위한 具體的 實踐代案의 범주를 고려할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하위 영역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이질성의 사회·경제적 근거와 역사적 근원에 대한 과학적

해명을 통해 이질성 극복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영역, 둘째로 그러한 합리적 대안을 국민 대중과 공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의 영역, 셋째로 그 공유된 합리적 대안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이다. 아래에서는 주로 두번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로 하겠다.

1) 異質性的 歷史的 根據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문제를 ‘이질성의 극복’의 문제로 축소·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는 미·소 등 강대국들의 교착적 역학 구조와 남·북 내 사회 성격의 차이 및 그에 근거한 분단 지향의 정치 역학에 의해 구조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질성은 단지 그러한 構造化된 分斷의 현상 형태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또한 그 현상 형태인 異質性的의 深化가 분단의 構造化를 더욱 強化시키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비록 분단의 역사적 연원과 구조적 근거를 해명한다 하더라도 平和的 統一이라는 대전제를 수용할 경우, 이질성의 극복 문제는 그 이행의 ‘평화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실천적 근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질성의 문제에 대한 전략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앞에서 이질성의 다양한 형태와 수준에 대하여 검토하였지만, 이질성의 역사적 근거는 분명 남·북한 사회의 상이한 발전 경로 전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질성의 심각성은 단순한 감정적 차이와 습관, 태도의 차이를 넘어서 정치 구조 전반과 정치의 실제 행위 주체인 개별자들의 전반적인 정치 감성과 태도·정향·문화의 이질화로 현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동일한 문제는 일방 감성적 차원에서 당위로서 선언되기도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회, 다른 정치 체제, 다른 사람들과의 결합으로서 이해되고 통용되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정치 현실로까지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질성의 문제를 분단 극복의 관건적 문제로 상정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서 교류·접촉 면의 점진적 확대라는 방

식을 이론적으로 제기한 사례도 이미 존재한다. 동·서독 문제 해결의 한 방식으로 제안된 커뮤니케이션 이론(communication theory)이 그것이다. 기실 그간 한국 정부의 공식적 통일 정책으로 차용되어 온 이러한 점진적 교류·접촉 방식은 그러나 그것이 상정하는 이질성의 수준이 매우 現象的이고 制限的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는 점 때문에 많은 한계를 노정시켜 왔다. 대부분의 경우 文化 영역으로 제한된 이러한 방식의 교류·접촉 면의 확대가 과연 이질성의 역사적 근거이자 구조적 근원인 社會經濟的 차이와 軍事政治的 대립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인지, 오히려 그러한 접촉 면의 확대를 통해 이질성의 本質的 문제 영역을 온존·확대·강화시켜 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요청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이질성의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그것의 다양한 현상 형태에 대한 개별적 접근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그 다양한 현상 형태로의 가시화를 규정하는 남·북한 간의 구조적 긴장 관계와 한반도 주변의 총체적 역학 관계 및 그것의 역사적 존재 양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만약 이질성에 대한 문제 인식의 수준이 이와 같은 보다 構造的이고 歷史的인 근거로까지 심화된다면, 이질화의 극복은 곧 分斷體制的 克服을 위한 구조적 접근 및 역사적 접근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통일은 차별성을 갖는 두 체제 간의 산술적 합산이나 무차별적 결합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두 체제가 현시점에서 발현하고 있는 그 전 역사 과정으로부터의 總括的 발전 수준의 새로운 質的 飛躍의 문제로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統一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는 체제간 모순과 군사적 긴장 및 국제 역학의 대립 구조를 發展的으로 解消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들 그리고 북한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들에 대한 止揚의 過程, 그리고 남·북한 간의 대립 구조로부터 주어져 왔던 반사적 이해의 根本的 解消라는 歷史的 發展過程으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이러한 문제 의식은 곧 統一된 韓

半島의 전망이 분단된 남·북한의 병렬적 통합을 量的으로 能加할 뿐만 아니라 質的으로 止揚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로 가는 과도기의 구체적인 정치적 형태 역시 단순한 결합을 위한 불가피한 기술적 과도기로서가 아니라, 양·질적 발전과 지양을 모색하고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치 과정으로서 상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통일의 주체와 과도기의 정치적 성격 및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한 대강의 사전적 동의와 합의는 통일의 역사적 당위성과 정치적 현실성 못지않게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統一指向의 政治教育

위의 논의에서 어느 정도 분명해졌듯이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은 단순히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감성적 역설이나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고통의 절규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핵심적으로 統一된 한반도의 發展의 未來像에 대한 설득력 있는 代案體系가 포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자가 통일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 접근이라면, 후자는 통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이다. 전자가 통일 문제 자체가 금기시되어 온 그동안의 冷戰體制의 상황으로부터 強制된 불가피한 현실이었다면, 후자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구체적 정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보다 主體的인 實踐樣式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거듭 지적했듯이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이 통일된 한반도의 이러한 한 단계 지양된 대안 체계에 대한 공유로서 진행되어야 한다면, 止揚의 대상인 남·북한 정치·사회 현실에 대한 批判的 認識이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논의의 전제로 된다. 그러나 바로 이 대목에서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여 왔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政治教育의 事前的 論議로 상징될 수밖에 없는 남·북한 정치·사회 현실에 대한 研究의 制限性에 기인한다.

그간의 연구 환경이 남·북한 정치·사회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 및 비판적 논의의 제

고에 대단히 많은 한계를 부여해 왔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남·북한 정치·사회 연구에 대한 정권적 차원에서의 空間外的 規制가 매우 강력하게 관철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극단적으로 相反되는 두 개의 傾向, 즉 일방적으로 북한 사회를 비난하면서 상대적으로 남한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는 경향과 다른 한편으로 북한 사회에 대한 일방적 수용과 남한 사회에 대한 선협적 비판이라는 또 하나의 경향이 존재해 왔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물론 사회과학에서의 당파성이 불가피한 학문적 속성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위와 같은 두 가지의 상반되는 경향 역시 그 선·악과 진·위를 떠나 자연스러운 연구 현실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자체에 대한 엄밀한 分析과 그것의 解釋에 대한 自由로운 논의와 토론이 가능한 研究環境이며, 이를 통해 걸러진 학문적 합의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그동안 ‘북한 바로 알기’의 수준에서 진행된 다양한 형태의 북한 연구가 일차적으로 목표했던 것이 바로 위에서 지적한 첫번째 영역, 즉 事實 자체에 대한 容觀的 認識의 제고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 ‘북한 바로 알기’ 수준의 연구와 독서가 때때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규제되어 왔던 학문적 현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惡循環, 즉 冷戰 체제의 구축과 냉전 체제의 강화로 인한 사실 인식 과정 자체의 構造的 어려움과 그를 克服하려는 ‘바로 알기’ 수준의 초보적 작업 및 이에 대한 政權的 차원의 司法的 對應이라는 악순환이 위에서 검토한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의 확보를 어렵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 인식’에 근거한 對自的 批判과 그를 통한 止揚態로서의 統一祖國의 未來像에 대한 동의와 합의의 창출이라는 과제가 論理的 宣旨의 차원에서만 云謂되었던 것 역시 불가피한 정치 현실이었던 것이다.

두번째의 어려움은 南·北韓을 포괄하는 한반도의 歷史的 展開過程에 대한 統一指向의 評價와 그 代案의 展望의 共有라는 연구 작업의 어려움이었다.

분단이 역사적 현실이라면 여기에는 분명 分斷指向과 統一指向 간의 정치 역학의 전개가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진행되어 왔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여전히 분단된, 그리고 그 분단이 보다 제도화되고 고착될 위험성까지도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한 내부의 정치 역학이 분단 지향 세력과 통일 지향 세력 간의 대립축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그러므로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은 바로 이러한 統一과 反統一의 對立部面에 대한 批判的 검토를 통하여 統一指向의 구체적인 實踐方案과 통일 지향 세력의 현실 정치적인 운동 양식에 대한 實踐的 解釋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남한 사회로 한정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로서 드러난 바 있지만, '48년 단정 수립과 한국 전쟁을 통해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분단 체제는 적어도 이승만 세력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5·16 이후 군부 독재 정권에게 있어서도 분단은 여전히 반사적 이익을 통한 정권의 유지에 유효한 정치 구조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統一과 反統一의 대립 부면은 형식과 양상을 달리하면서 현재에도 여전히 형성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科學的 解明이야말로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이 담아내야 할 정치적 내용이며, 더 나아가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의 구체적인 실천적 대안의 차원으로서 제기되어야만 할 문제 영역인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이 포괄해야만 하는 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分斷을 強制한 냉전적 대립 구도에 대한 二分法的 인식을 克服하고, 분단의 문제를 한반도 전체 민중의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는 認識論的 轉換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世界史에 대한 主體的 認識과 한반도 전체 민중의 자기 발전의 경로에 대한 주체적 역사 인식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분단을 강

제한 여러 政治力學의 自己理解에 대한 合法則的 解明을 포괄하여야만 할 것이다.

둘째,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비극이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까지 이르는 민족적 발전의 절곡으로 되고 있는 具體的 內容들에 대한 批判的 認識을 共有하는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統一이 막연한 당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具體的으로 어떠한 內容을 갖는 當爲인 것인가가 분명한 형태로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며, 바로 그 통일된 조국에서의 삶이 남·북한의 현재적 삶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양되고 보다 풍부한 것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공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셋째, 統一된 한반도의 政治的 位相과 比重에 대한 보다 積極的인 評價의 共有가 필요할 것이다. 차선책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最善策으로서의 統一로서 받아 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통일의 政治的 意味가 소극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體化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統一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世界的 次元에서의 平和構造 정착을 위한 최초의 힘있는 출발로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통일은 남·북한의 반사적 이해에 근거한 사회·정치적 왜곡을 교정하기 위한 전제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韓民族의 潛在力을 어디까지 發顯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民族的 雄飛의 출발로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이 갖추어야 할 이러한 내용은 결국 統一問題에 대한 問題認識의 근저를 根本的으로 提高할 때만 가능한 것이며, 분단을 강제하고 있는 內·外的 條件들에 대한 극복의 對自的 意志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때 가능해질 것이다.

3) 統一指向 政治教育의 具體的 實踐

통일이 일부 청년·학생·지식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계급·계층의 공통된 문제라는 점 때문에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통일 지향 세력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을 수 없

을 것이다. 教育 對象의 이러한 특수성은 곧 教育方式의 특수한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大衆의 政治教育은 그 교육의 내용, 수준 및 대중과의 결합 형태 등에 있어 다양한 방식의 개발을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은 大學의 틀 안으로 제한될 수 없다. 그것은 엄밀한 이론적 학습과 연구 방법론의 체화라는 차원이 아니라 통일 문제에 대한 總體的 입장의 前向的 統一의 문제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학만이 아니라 통일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갖고 있는 모든 계급·계층이 존재하는 바로 그 大衆의 政治의 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강의와 수업 방식은 유용한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지만, 결코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다. 오히려 통일 지향에 대한 거부감 감성과 정의의 차원에서 훨씬 강고하게 남아 있는 既成世代들—특히 해방 8년사와 한국 전쟁을 실체 경험함으로써 반공 이데올로기의 반사적 강화로서 통일 지향에 대한 生來의 拒否感을 갖는—에게 있어 통일 지향의 교육은 보다 本質的인 重要性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들에게 ‘교육’이라는 방식이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게 될 것인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아마도 그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政治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에 있어 사회적 경험—특히 제도화된 교육이 채 완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과 같은 대단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사회적 경험—을 장기간, 그리고 집단적으로 공유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과정에서 형성된 政治定向(political orientation)이 강고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미 확고하게 갖고 있는 반공·반북적 정서를 開放的 信念體系로 轉換시키고 그것을 共存의 政治定向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껏 잠체적으로나 가시적으로 적대시해 왔던 北韓과의 통일을 前向的으로 받아 들이도록 하는 사전적 작업이 단순히 교육의 차원에서 이질성의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상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난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의 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란 단, 이들에 대한 教育의 方式이 보다 前向的인 것으로 轉換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쳐야만 할 것이다.

첫째, 교육의 대상인 그들로 하여금 대상화되고 개별화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立地를 對自的으로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에 대해 드는 남·북한에 대해 수동적 반응을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어쨌든 그 모든 문제를 自身의 問題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主體의 自己 認識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만이 문제를 客觀的으로 그리고 보다 積極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일차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물론 대상화된 인간으로서의 即自의 生活에 익숙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계가 構造的으로 強制되기조차 하는 현재의 사회·정치적 조건에서 자신을 對自的으로 세우는 일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임은 충분히 짐작되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왕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둘째, 이들 對自的으로 자신을 定立한 교육 대상들에게 있어 정치교육은 수미일관하게 自護的 參與와 主體의 認識 發展이 보장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파행적이고 단절적인 남·북한 정치 구조로 인한 정보와 사실 근거의 절대적 부족은 교육의 진전을 둔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장애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障礙를 克服하는 方式이 얼마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것인가에 따라 教育의 効果는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速度의 上昇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教育의 內容이 가능한 한 具體的이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통일이라는 일면 매우 낮은 수준의 감성과 정서의 문제는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의 추상과 관념의 차원으로 받아 들여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통일의 문제로 중첩되어 있는 다양한 역학과 변수들의 복합적 결과가 대중들의 정서와 감성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추상적 당위와 논리적 대안으로 외화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리와 추상 수준의 통

일 문제를 大衆의 具體的 生活의 問題로 提示하고 또한 大衆의 그러한 구체적 삶과의 結合의 차원에서 제기할 때, 對自의으로 자신을 정립한 自發의 大衆과의 통일 문제에 대한 具體的 共有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하면서 이제 大學에서의 統一指向 政治教育의 구체적 실천 양식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大學教育이 사회 일반에서 행해지는 포괄적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차원의 교육이 제대로 그 位相을 定立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自由롭고 開放된 그리고 남·북한의 現實을 한 단계 止揚한 대안적 체제로서의 政治指向을 분명히 한 統一祖國의 未來像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政治教育의 質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가능케 할 研究環境을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서 한반도 전체의 운명과 한민족 전체의 미래에 대한 역사적 전망과 발전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研究狀況이 정권안보적 차원의 恣意的 權力行爲로부터 일단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연구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싼 法理的 攻防이 예상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실정법 체계 자체가 애초부터 민족적 발전을 제한하려는 目的意識性을 갖는 것이 아니라면 '연구의 자유'를 실현할 여건의 조성에는 어떠한 不當한 留保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둘째, 大學教育의 政治的 指向은 敎科課程으로 집약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교과과정은 곧 대학의 모든 연구와 학습, 정치적 지향과 학문적 실천의 응집으로서 받아 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그간의 교과과정에서 통일론, 통일정책론 및 그와 연관된 남·북한 비교 연구나 북한 사회와 정치에 대한 객관적 연구 등 統一 지향의 政治 교육이 포괄해야만 될 下位 연구 領域들이 거의 대부분 排除된 채 단지 '국민윤리'나 '인간과 국가'와 같은 국책 과목의 수준에서 대단히 피상적·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도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의 不在狀況을 응변으로 보

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이 대학 내에서 제도화된 형태로 學問的 市民權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과과정의 前向的 改正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교과과정의 개정 문제는 敎科課程이 대학교육에서 갖는 위와 같은 막중한 政治的 意味 때문에 결코 졸속으로 또는 임기응변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 敎科課程의 改編 문제를 위한 집중적인 연구를 장시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여기서 분명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制度的으로 확보될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은 정권적 이해나 일시적 정세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獨自의 教育 根據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公認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은 그 문제의 성격상 一方的인 敎授와 學習으로 시종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대학 구성원 모두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은 모든 교육이 본질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교육자와 피교육자와의 相互交互와 自發的 合意가 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상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統一指向의 政治教育이야말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나 기능의 숙련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共同體的 삶에 대한 實存的 決斷이자 實踐的 合意를 指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은 教育의 內容에 못지않게 教育의 方式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것은 주요한 교육 형식인 강의는 물론 보조적 교육 형식인 집단 토론, 집단 연구 및 연구·학습 결과의 비판적 공유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있어 集團的 同參이 主體的 自發性에 의해 담보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항상적인 토론과 상호 수용을 통하여 최소한의 共感帶를 量·質적으로 擴大시켜 나가는 과정이어야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이 위에서 제기한 교육 조건과 교육 내용 및 교육 방식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의 이론적 합의를 도출하고 논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만 제한된다면, 그것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교육 부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최소한의 긍정적 의의는 부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大學과 大學教育이 항상적으로 규정받는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적 지향의 內容的 深化와 外延의 擴大로 확장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만약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이 지향해야 될 궁극적 지향점이 교육의 공유 또는 정치 지향의 공유가 아니라 그것의 구체적 실천과 현실로의 의화라는 점에 합의할 수 있다면,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 역시 그것의 現實的 實踐樣式의 문제로까지 문제 의식을 확대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물론 그것이 대학교육의 단순한 외연적 이식으로서의 사회적 확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大學과 社會 관계의 올바른 定立이라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혀 새로운 문제 영역이다. 그러나 특히 統一 문제가 현 단계 한국 사회에서 갖는 二重的 特殊性, 즉 국민 대중의 대단히 높은 情緒的 當爲와 感性的 合意의 수준과 반면에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적 閉鎖性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감안할 때,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은 전자, 즉 대단히 높은 정서적 당위와 감성적 합의를 올바른 論理的 當爲와 代案的 發展展望에 대한 합의로 止揚해야 될 뿐만 아니라 후자, 즉 강력하게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적 폐쇄성과 그에 근거하여 심화되어 가는 이질성의 문제를 감성과 정서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民族 전체의 發展展望에 근거한 對自的 批判을 통해 한 단계 고양된 同質性의 회복으로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을 통일 문제의 이러한 이중적 특수성을 對自的으로 止揚한 발전 전망을 체계적으로 제시·공유함으로써 그 교육의 영역을 대학 밖으로 合法則的으로 擴大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統一指向 政治教育의 發展的 展望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의 변화 추이는 전 세

계적 차원에서 기존의 냉전 질서를 부분적으로 와해시켜 가고 있으며, 국제적 역학 관계에 의해 강력하게 긴박되어 있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 역학까지도 상당 정도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변화 추이의 대체적인 경로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이완시키면서 국제적 갈등을 제도화시키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정세의 이러한 변화 양상이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미치게 될 영향력의 추이는 매우 복잡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러한 추이 양상을 보이는 국제 정세의 변화의 근저에는 여전히 미국·소련 등 강대국들의 국내적 이해 관심과 그에 밀접히 연관된 세계 전략의 조정이라는 대립적 운동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 한반도 주변 정세는 한반도가 역사상 되풀이 직면해 왔던 대단히 複舍的이고 力動的인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역할했던 것이 民族 전체의 결집된 主體力量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의 정치적 의미를 더욱 강조하게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 의식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결집된 주체 역량의 문제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때는 예외없이 內部的 問題로 인한 分裂과 對立이 深化되었을 때라는 점이다. 그러한 면에서 현재의 한반도는 '45년 이래 이러한 민족적 대립과 분열이 전 한반도의 차원에서 10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낸 동족 상잔의 전쟁까지를 거치면서 45년간이나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전 한반도적 대립·분열이 南·北韓 정권의 反射的 利益 活用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오면서 民族的 異質化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남·북한 공히 그 내적 분열과 대립을 더욱 확대·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 일관되게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의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현실태를 극복하고 한 단

계 지양된 대안적 정치 체계를 포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박한 진전과 고조되는 역동적 변동의 징후들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이 긴박한 만큼이나 대자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본고의 이러한 宣言的 主張이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용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심각한 한계로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본고의 問題意識이 절박한 만큼이나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이 채워내야 할 내용의 現存的 低級性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치학 영역의 연구 과제로만 제한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統一 指向의 政治教育이 그러한 국내·외적 조건 속에서 확보해야만 할 우리들의 최소한의 主體的 研究 實踐이라면 그것의 발전 전망과 그 발전 전망의 절박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반면에, 바로 이 지점에서 그 발전 전망의 내용을 채워내야 할 의무가 현 단계 한국 사회로부터 규정받는 모든 부분의 연구 영역과의 共同作業의 형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지적

한 異質化의 存在 樣式은 각 연구 영역 간의 聯關의 구체적 形態에 대한 약간의 示唆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학문이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학문적 방법론과 총론적 방식을 갖고 있다면, 統一 문제야말로 그 모든 학문·총론적 방식을 통한 總體性의 確保가 관건적인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타 연구 영역과의 연관 문제는 교육 내용의 총체성의 담보라는 범주로 제한될 수는 없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교육이 수용되고 실현되는 구체적 場의 사회적 확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결정적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에서의 異質化의 극복과 同質性의 회복이라는 지향을 갖는 研究 實踐의 集積만이 통일 지향의 정치교육이 내용적으로 심화되고 형식에 있어 외연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대학과 사회 전 영역에서 일상적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로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統一 指向의 政治教育은 통일이 민족적 과제로 공유되는 한 그 정치적 비중을 더해 갈 것이며, 그와 관련된 연구 및 교육의 학문적 중요성을 더욱 강화시켜 갈 것이다. *